



- 아울러, 정부의 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’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하였음
- 끝으로, 그 외에 정부가 제출한 ‘소득세법 개정안’ 등 10개 세법개정안은 우리 당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였음. 그 결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약속대로 폐지하고, 같은 날부터 시행예정이던 가상자산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도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2년간 유예하였음

## 2. 2025년 정부예산안 심사 성과

-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에서 합의 처리된 세출 감액사업 이외에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감액하여 총지출을 정부안 677.4조원에서 △4.1조원 감액하였음
- 민주당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감액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
  -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.3조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4.8조원 中 △ 2.4조원 감액
  - 정부가 올해 8월에 국고채 이자율을 3.4%로 전제하여 편성하였으나, 10월~11월 동안 기준금리가 0.5%p 인하되어 그에 따른 국고채 이자율 인하효과를 고려하여 △0.5조원 감액
  - 감감이 예산 집행으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△82억원, 검찰청 특수활동비 △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△506.9억원, 감사원 특수활동비 △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△45억원, 경찰청 특수활동비 △32억원을 감액하였음. 필요성과 집행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,국세청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였음.
  -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사업예산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유전개발사업 출자(8광구-6-1광구) △497억원 감액
  - 수원국이 분쟁지역이거나 수원국에서 사업을 취소하는 등 집행되기 어려운 ODA사업 예산 △762억원 감액

- 지적재산권 분쟁, 사업성과 도출 불확실, 사업지연 등의 우려가 있는 글로벌 R&D사업 △392억원 감액
  - 위법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△4.1억원, 행안부 경찰국 경비 △1.1억원 감액 등
- 그리고 목적예비비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소요비용과 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정부로 하여금 미래를 위한 교육과 보육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
- 또한 세출을 △4.1조원 감액하는 한편, 정부가 잘못 편성한 세입 △0.3조원을 감액하면서 국채 신규발행 규모는 △3.7조원 줄여서 재정여력을 확보하였음
-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예산안으로 국채발행 규모를 △3.7조원 줄여 재정여력이 확보된 만큼, 이를 통해 향후 정부가 민생, 경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할 것을 촉구함

2024. 12. 10.

더불어  
**민주당**

**진성준 정책위의장,**

**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,**

**정태호 기획재정정책조정위원장**